



# 제주4.3항쟁 반세기를 돌아보며

오금숙

제주4.3연구소 연구원

1987년 한국사회의 '민주변동' 이후  
한국전쟁 다음으로 한국현대사 최대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4.3제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반세기전 공산반도를 토벌한다는 미명하에 미군정과 국우의  
국가권력이 수만명의 양민을 살상한 4.3항쟁을 돌아보았다.

1998년은 4.3항쟁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하여 4.3은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4.3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비단 숨겨져 있던 사실을 들춰내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역사를 반성할 수 있게 해 주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올 역사에 대해 임해야 할 자세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다수의 민중을 학살하고 억압했던 비극적인 상황을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제주도 전체인구의 1/8에 해당하는 3만여명이 학살되었다는 비극적 상황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엄연히 일어났는데도 그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집권세력들에 의한 고의적인 정책의 결과였다. 4.3을 거론한

다는 것은 곧 국가권력에 맞선다는 공식으로 우리를 짓눌렀던 것이다.

## 해방이후의 제주도

해방이 되자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일제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여 자주적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식민지 경제구조를 변혁시키고자 노력한다. 제주도는 변혁운동을 함에 있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최적이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일제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한 경험이 있었고 (1919년 조천만세운동, 1932년초 잠녀투쟁, 1932년 이후에 전개된 '적색농업조합 건설운동' 따위) 둘째, 징병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거 귀환하여 인구가 6만여명이 더 늘어난다(47년 인구조사시 제주인구는 약 27만5천명으로 추정됨). 이들은 일본 등지에서 민족차별을 경험하고 사회의식에 눈을 뜬 사람들이어서 변혁의 의지가 높았다. 셋째, 소작비율이 9%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서 내부의 계급대립도 심하지 않았고, 제조업 비율도 낮아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도 거의 없었다. 넷째, 제주도 특유의 공동체적 삶의 형태가 잔존하고 있어 의식의 공유가 수월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변혁운동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갔다.

8.15해방이 되자 전국적으로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며 이어서 '인민위원회'로 개편된다. ('인민'은 당시 가장 흔하게 쓰인 말로 현재 '민중'에 해당하는 의미)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45년 9월 22일 결성된다. 인민위원회에서 처음 주력한 사업은 치안유지와 적산관리였고 점차 지역주민들의 협조 속에 주민교육에도 힘을 기울인다.

그러나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정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친미 정부를 수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미군정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는데 장애물이 되는 인민위원회를 분쇄하기 위해 친일파와 극우 반공 세력을 동원하고 이들을 통해 인민위원회와 민족운동진영을 탄압하였다.

1947년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은 '제28주기 3.1 운동'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하였다. 대회는 각 읍면 단위로 개최했는데, 제주읍은 인근의 애월면과 조천면을 합쳐 제주읍의 북국민학교(현재 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대회장인 북국민학교에는 3만 인파가 모였다. 기념식이 끝나고 시위에 들어간 민중들은 관덕정(제주읍 중심지, 북국민학교 인근에 위치) 마당을 지나 흩어져 가고 있었다. 이때 이 대열 후미를 향해 경찰이 발포하여 6명의 사망자와 8명의

증상자를 내었다. 이렇게 미군정이 의도적으로 희생자를 내자 민심은 흥흥해지기 시작했고, 경찰과 미군정에 그 책임을 묻게 되었다.

3월 10일, 민전을 중심으로 제주도 총파업위원회를 결성하고 파업투쟁을 지도할 전도적 조직을 구축했다. 3월 12일에는 도군정청을 비롯하여 전도의 관공서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도청의 파업에 이어 모든 관공서는 물론 은행, 회사, 학교, 교통, 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단체 직원이 파업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마을의 구멍가게, 경찰들까지도(나중에 파업가담 및 직무태만 혐의로 66명의 경찰이 파면됨) 파업에 동참했다.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관공리 대파업이었다. 이에 미군정은 제주인의 80%가 좌익지향적이거나 좌익에 동정적이라는 조작논리로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대량 증파하고는 소위 '빨갱이 사냥' 전략을 구사했다. 2천 명 이상이 체포되고, 2백여명이 구속되었다. 3.1발포 사건에 이은 3.10총파업은 결국 미군정과의 정면 대결로 치닫게 되고 다음해 4.3무장항쟁으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된다.

수많은 청년들이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을 피해 입산하기 시작했다. 한라산은 1,300여개에 달하는 자연동굴과 2차대전 말기 일본군이 설치해 놓은 각종 군사시설로 좋은 은신처가 되었다.

1948년이 되자 제주도 민족세력들은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정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무장대는 3.1사건 이후의 탄압으로 각 면 단위의 핵심운동가들이 입산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47. 5. ~ 47. 8)'가 결렬되면서, 미군정은 자신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유엔을 통해 38선 이남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강행한다. 미군정의 이러한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민족운동진영은 거센 반발로 이어진다. 이러한 단독선거·단독정부의 결정에는 이승만과 김성수가 이끄는 한민당만이 찬성을 했을 뿐, 김구와 김규식이 이끄는 우파와 중도파 정당에서도 조선을 영구히 분단화시킨다며 맹렬히 반대를 했던 것이다. 특히 남로당과 민전에서는 이 결정에 즈음하여 단선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국적 차원의 '2·7구국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 후 겹겨 바람이 불어닥쳤다. 이미 제주경찰의 수뇌부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경찰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거기에 서북청년단의 횡포까지 겹쳐 일단 경찰에 연행된 자는 초죽음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1947년)의 3.1시위운동 이후 이리저리 쫓기던 청년들은 대거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제주도민들은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맞아죽을 거 아니냐'는 공포감과 또한 미군정과 경찰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에 대한 불만이 부풀대로 부풀어 있었다.

48년 3월이 되자, 5.10 단선을 앞두고 좌파세력(남로당 제주도당 및 좌파조직)과 제주도민들은 우리민족이 두개로 나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하기 시작했다. 좌파세력은 선거인등록을 저지하는 것이 단선을 막아 조국의 통일독립을 쟁취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도민들은 선거인등록거부 및 선거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다.

## 미군정과 의 충돌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제주 4.3은 수많은 오름(岳,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기생화산)에 봉화가 오르는 것을 신호로 1천 5백명의 무장대들이 행동을 개시하여 제주도내 24개 경찰지서 중 11개를 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이 발표한 호소문에는 무장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민중 생존을 위한 자위적 공격이며(반경찰, 반서북청년단), 둘째, 단독선거 단독정부 기도를 저지하여 통일조국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며, 셋째, 제국주의로부터의 민족해방을 달성하려는 자주화 투쟁이라는 것이었다. 통일세력들과 민중들이 결합한 제주항쟁은 자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초기에는 성공적이어서 미군정을 당황케 하였다.

4월 27일, 미군정은 국방경비대 제9연대를 진압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9연대장인 김익렬은 진압에 앞서 유격대에 협상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김익렬과 유격대 총지휘자 김달삼은 구역국민학교에서 4월 28일 평화회담을 갖게 되고 서로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속에서 유격대를 해산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차츰 전투행위가 중지되어 갔다. 귀순자들도 많아져 갔다. 비록 산에서 처음 내려오는 귀순자들은 노인이나 아이들에 불과했지만, 오랫동안 제주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5월 1일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제주읍의 오라리를 습격하여 방화하는 소위 '5.1 오라리 방화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일에는 귀순자 2~3백명이 드루스 대위의 인솔하에 미군 2명과 9연대 군인 9명이 오라리를 거쳐 비행장의 임시수용소로 호송되고 있었는데, 돌연 경찰 50여명이 쫓기관총과 카빈총을 난사하며 이들을 공격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은 평화회담이 깨어지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처음 이 사건은 유격대측의 공격으로 알려졌다으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군정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라리



소개·발화·처형으로 이어지는 민간인 대량살육작전으로 제주도의 마을 169개 중 130개가 불태워진다. 위 그림은 군경토벌대를 피해 험라산 자락으로 피신한 제주도민을 그린 것이다.

마을을 군경을 시켜 방화하고 이를 유격대가 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더우기 미군정은 그날 일어나는 상황을 미군 헬기로 공중 촬영, 무성기록영화(영화명 '제주도 메이데이')로 만들어 세계적으로 선전하는데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 필름은 현재 '미국립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이처럼 미군정과 경찰 측은 평화회담을 무산시키고, 국제법상 금지된 초토화 작전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군정이 김익렬로 하여금 국제법상으로 금지된 초토화 작전을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김익렬은 그의 유고록에서 '초토화 작전을 실시하라. 임무 완료 후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 가서 살라.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전한다. 결국 미군정은 수만의 제주도민의 목숨을 돈으로 흥정했던 것이다. 김익렬이 이러한 작전을 거부하자 즉시 김익렬을 퇴임시키고 연대장을 박진경으로 바꾸어 초토화 작전을 실시했다. 문제의 이 오라리 방화 조작사건은 미국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으로, 이후에 실시되는 무차별 강경 진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계략으로 작용된 셈이다.

5.10단선이 임박하자 제주도 전역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무장대는 선거사무소를 습격하고 사무원들을 납치하기도 한다. 결국 5월 10일의 단선에서 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에서는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효화되는 전국 유일의 사태가 벌어졌다.

단선을 반대했던 해변마을 주민들은 선거 전날 밤, 투표를 거부하기 위하여 이

불 등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뒷날 선거가 끝난 후에야 돌아왔었다고 기억한다. 그만큼 단선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가 부정적이었다.

5.10단선의 무효화는 미군정과 반통일 세력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었다. 유엔조 선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던 미군정 측으로서는 국제적으로 그들의 정당성에 훼손을 입게 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반면 무장대와 제주 민중들에게는 통일정부에의 열망이 일정 부분 수렴되는 쾌거였다. 그러나 항쟁의 이러한 부분적인 승리는 그후 군경의 대토벌과 그로 인한 제주민중들의 대학살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 "30만 도민을 없애라!"

주한임시군사고문단(PMAG)의 자문 아래 군경합동의 대토벌과 학살작전은 단선 직후부터 다음해 5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될 때까지 다섯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주도 전도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30만 도민을 한꺼번에 태워 없애 버려라'는 당시경무국 지도부의 말대로 무차별 소탕작전과 유혈진입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10월 19일의 여순항쟁의 발발은 항쟁의 타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두려워한 미국과 신생 정부가 대학살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군경은 무장대와 중산간 마을 주민과의 연계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중산간 마을을 불지르고 주민들을 해변 마을로 이주시키는 소개작전을 전개한다. 또 소개 - 방화 - 처형으로 이어지는 소위 '민간인 대량살륙작전' (a 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 미군정 정보 보고서, 49.4.1일 자)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는 물론 제주도의 169개 마을 중 130개 마을이 불태워진다.

이 무렵부터 토벌대의 공격은 일반민중에 대한 집단학살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록상 첫번째 집단학살은 48년 10월 27일 애월면 고내리에서 발생했다. 그 전날 이곳에서 유격대와외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토벌대가 그 보복으로 100여명의 주민을 신적로에 세워놓고 일제사격을 가한 것이다. 이처럼 집단학살은 교전 중의 적을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주민을 향해 무의미하고 무자비한 보복학살의 형태를 띤다. 11월 13일에는 애월면 소길리 원동마을에서 마을을 불태우면서 주민들을 무차별학살하였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48년 음력 12월 18일, 19일 이틀간에 초천면 북촌리에서 주민 500여명이 집단학살 당했는데 이때 마을 남자 대부분이 죽어 이 마을은 한때 무남촌(無男村)이라

불렀다.

48년 10월 부터 다음 해 봄까지가 가장 많은 주민들이 학살된 시기이다. 최근 발굴된 자료(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에서 1949년 4월 1일자에 작성한 『제주도 사태』)에 의하면 희생된 주민 중 최소한 80%가 군경토벌대에 의해 학살되었음을 미군정 스스로가 밝히고 있다.

통일조국을 갈망했던 제주민중들의 이상은 지워지고, 그 지워진 자욱 위에 지속적인 토벌과 예비검속, 6.25전선으로의 반강제적 투입,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연좌제가 덧칠해져 최근까지도 끈질기게 제주인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왜 지금까지도 철저히 은폐되고 그 진상이 왜곡되어져 왔는가.

#### 4.3항쟁 진상 규명해야

우선 제주항쟁의 왜곡 원인은 첫째, 단선을 거부한 제주민중들을 학살한 책임이 미국과 단정세력에 있고, 그들 세력이 사실상 최근까지도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향된 반공이데올로기만을 앞세우고 그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여 왔던 것이다. (비슷한 예로 대만의 1947년 2.28대학살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학살사건은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패퇴하여 대만에 자리를 잡으면서, 대만 원주민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다. 민주화 운동 세력에 밀린 대만정부는 최근야야 그 진상을 조사하고 희생자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둘째, 제주항쟁 이후 그 진상을 규명할 주체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도민들 모두가 생존의 길로 나서는 일이 더 시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제주항쟁은 40여년 세월 동안 꺾소문이나 관변자료 등으로만 전해지다가 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논의와 연구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주 4.3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최초로 민간단체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1989년 5월에 출범한 <제주 4.3연구소>가 그것이다. 또, 1988년부터 10여년 동안 신문연재를 통하여 4.3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는 한국어판(전 5권)과 일본어판으로도 출간하는 등 4.3연구에 또 다른 공헌을 하고 있다.

제주항쟁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마을 단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후 일반 연구

자들의 참여와 더불어 역사적 진실을 복원해내는 것이다.

한가지 고무적인 것은 94년 4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전역에 걸친 피해조사(1차)를 벌인 가운데 1만4천의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미흡한 지역이 많아서 2차 3차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95년 도의회 차원에서 도의회 의원 7명을 정수로 하는 '4.3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를 근거로 국회 차원의 「4.3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

또, 희생자들을 국가적으로 위무하기 위하여 위령탑을 세우고, 후손들에게 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공원조성 및 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학습장으로 삼아야 한다.

4.3이 일어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50년이 아니라 5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자 증언채록을 하다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 당시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지금은 많이 고령화 되었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다. 더 이상 방관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4.3진상규명의 과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그것은 역사를 후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에 38선이 그어지지 않고 남북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4.3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은 항시 우리 곁을 맴돈다. 이것은 남북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1998년은 비단 4.3 50주년을 맞는 해뿐만 아니라 역대정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정부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 현 정부에게 적극적인 4.3해결 방안을 기대해 본다는 것은 우리들의 과욕일까? ◆